

투데이 칼럼

북한군 포로 한국행 수용 문제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망명 의사가 전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실은 매우 참혹하며 이들 역시 김정은 정권 인권 침해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 위원회는 북한군 포로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그들이 고향인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북한으로 송환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결국 한국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지난 2월 19일 공개된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리 씨는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러시아에 왔으며,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리 씨는 ‘내가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

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리 씨는 제대 후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려고 했다”면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나이가 젊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아마도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상황은 인도적 문제로 한국이 망명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규칙이 무엇이든, 개인이 사로잡혀 적진에 남아 돌아가지 않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는 향후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들과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가 그들의 처우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

북한 포로들은 단순히 총알받이로만 보내진 것이 아니며, 훈련을 위해 보내진 것도 아니다. 김정은이 푸틴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보내진 것도 아니다. 거기에 보내진 근본 이유는 돈이며, 김정은이 돈을 벌기 위해 보낸 것이다.

북한군 파병은 근본적인 인권 침해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병사들을 포함한 인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팔아 가지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는 향후 러시아군에 붙잡힌

황이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이유는 단지 러시아와의 관계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군 병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북한군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속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에 전혀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나 인신매매된 여성 처럼 또 다른 희생자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또 다른 얼굴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 역시 한국 국민이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에 속아 총알받이로 이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한국에 이미 탈북민 3만 3천 명 이상이 정착한 것처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선관위는 가족 회사인가

감사원이 전국 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잇따르자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A씨 자녀를 채용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결원이 없는 데도 경력 경쟁채용 인원을 배정한 것이다.

A씨 자녀에게 유리한 채용 조건을 만든 것은 물론, A씨와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험위원을 꾸렸다. 감사원은 서울선관위를 포함한 7개 시도선관위에서 이 같은 특혜 채용과 점수 조작, 증거 은폐 등을 적발했다.

2013년 이후 모두 167차례 경쟁채용이 실시됐는데, 이 과정에서 602건의 규정 위반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북선관위의 한 계장은 전선관위 직원의 자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지원했

는데도, 서류전형 위원에게 합격을 유도하고, 다른 응시자는 ‘자격이 안 된다’며 불합격을 유도했다.

전남선관위에서는 면접시험 외부 위원들이 귀가하자 평점표를 임의로 작성해 전 사무총장 자녀 등 6명을 합격시켰는데, 이들 중 4명이 추후 절차에서 탈락했다.

특혜 채용 관련자는 감사 과정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일부 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지정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했고, 가족 채용 등을 앞서 인이하게 대응했다. 강원선관위의 한 과장급 직원이 무단결근 100일, 허위 병가 81일을 모두 정상근무로 처리해 3,800만 원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연구원의 운영 실태

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시키고 있다.

도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원만 60여 명에 이르는 전북 자치도의 싱크탱크다. 민간 싱크탱크를 모태로 2005년 전북도의 출연을 통해 ‘전북발전연구원’이 출범했고, 이후 ‘전북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 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전북연구원의 경제 효과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전북도가 연구원의 보고서를 사전 검열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독립성

과 신뢰성이 생명인 연구 기관임에도, 사실상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명분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연구원은 도에서 의제를 던져주면 거기에 맞추는 식이 돼버렸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된 데에는 지방연구원로서 구조적인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해마다 전북연구원에 60~70억 원 상당을 출연하는데, 연구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출연 기관이다 보니 절대 갑에 대해서 절대 을로서 제대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연구원장 임명 역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만 사실상 도지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북연구원은 도정 발전을 위해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초트룰 두첸’ 맞아 설법하는 달라이 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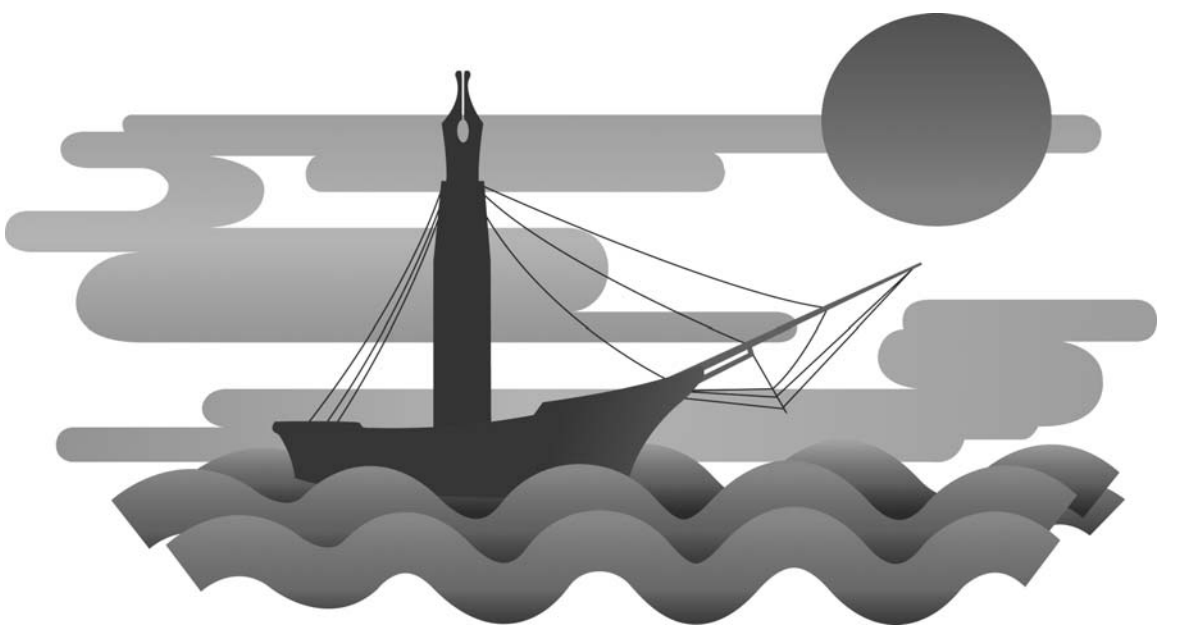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지난 14일(현지 시간) 인도 다람살라의 추글라 캉 사원에서 티베트력 새해 15일째인 ‘초트룰 두첸’을 맞아 설법하고 있다.

훈장 수여식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키이우에 있는 이슬람 센터에서 라마단 이프타르에 앞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